

함께 고민해야 할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본부장 **최재경**



60년 만의 대운을 지닌 흑룡의 해라는 올해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의 대선으로 정치권이 크게 소용돌이 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그리스발 EU권 약재와 이란 사태로 인한 원유공급 차질 등으로 불확실한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이나 계층 간·세대 간 갈등,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보·혁 논쟁 등 골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더하여 2011. 12. 17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한층 불투명하고 복잡다단해 진 남북문제도 안고 가야하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관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 건전성이라는 화두가 이슈의 중심에서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 지방재정의 방향을 '건실하고 알뜰한 지방살림살이 구현'에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적 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년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유자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여부는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1991년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79.1%였으나, 2001년 57.6%로 감소되었으며 작년에는 51.9%로 겨우 50%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비중은 전체 조세의 약 21%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데다 피부양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세입의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인한 세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여, 지역 생산력의 위축을 초래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재정력은 더 취약해 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작년 서울시장선거의 쟁점이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쟁에서 보듯이 금년에는 복지의 확대 추세가 격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코 앞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고령자, 아동, 장애인, 실업자 등에 대한 선심성 무상복지 공약이 급증하고 있으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유·무상 복지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은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계층별로 공평한 복지혜택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지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유리한 교육, 의료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몫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일부비용 분담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자체로서는 세입 한도를 훌쩍 넘겨 지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재정요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점이다. 시급한 복지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문제제기만 하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결책을 마련하겠지 하는 생각을 떠나서 스스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과연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심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지방재정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2012 금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심층 연구·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공제회에서 2월에 '지방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리공제회는 '지방재정과 지방세'라는 월간지를 매월 발간하여 지방재정정책의 흐름을 소개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선진 외국사례 등을 기재함으로써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월간지의 지방세 분야를 지방세연구원에 이관하고, 우리공제회에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지방재정 위주의 격월간지인 '지방재정'을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하여 독자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토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는 현안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는 마당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과 공제회 회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격려와 질책이 있기를 기대한다(*).